

조희대 “재제청 요구, 헌법 근거 없어”… 사법독립 강조

(대법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 “헌법상 권한 존중하기 위한 결정” 삼권분립 이유로 국감 증언 거부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이유를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와 “대법관 공석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구성이 조속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구체적으로 “저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나, 결국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면서 “이후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그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고,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며 “저는 이러한 사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법사위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자신을 대법원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우리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대법원장과 국회 대통령에게 각각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대법원 구성에 관한 권한이 조화롭고 독립적으로 행사되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헌법의 취지에 비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하여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지

난 8월 법사위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같은 취지로 설명드린 바 있다.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대법관 제청에 관한 증언을 요구하고 있어 부득이 이에 응하기 어려운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 대법원장은 선서나 증언 요구에는 삼권분립과 사법독립 원칙에 따라 응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한편, 대법관 재제청 갈등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사전 조율 없이 대법관 후보 2명을 서면으로 지명·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청와대는 이 중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대법원장에게 후보를 다시 제청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조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2일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정치권의 이슈가 되기 시작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윤호중 “중수청, 권력형 범죄 엄정 대응”

(행정안전부 장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 중대범죄수사청 조기 안착 등 과제 AI 활용 재난 예측 체계 구축 추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새로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해 “우리 사회에 가장 힘 있는 자들의 범죄를 다루는 동시에 가장 힘없는 이들의 권리를 지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사기관으로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기틀을 다지고 있다”며 “새롭게 출범한 중수청이 민주주의와 공정한 자유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임무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내부 비리 척결과 수사 시스템 쇠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부실 압장 수사로 실추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부 비리 척결과 수사 시스템 쇠신 등 경찰 개혁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사회적 참사와 재난 피해자분들이 일상을 온전히 회복하실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고, 산불과 호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복구 지원을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며 “가을철 산불과 겨울철 대설, 한파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연말연시 축제와 행사도 인파 사고 ‘제로(0)’를 이어갈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방재 기준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활용해 재난을 정밀하게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갖추겠다는 계획도 내놔다.

지역 균형성장과 관련해서는 “변화된 인구와 지역 여건을 반영해 인구감소지역

을 새롭게 지정하고 지역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지역 간 격차를 고려한 지방 우대 기준을 정책 전반에 폭넓게 적용해 비수도권을 더 두텁고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지방의 자주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지방 주도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 기존 세원 일부를 지방 주거복지세로 전환하고,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공직 AI 전문가 2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도 꺼냈다. 윤 장관은 “AI 국민비서를 통해 국민이 찾기 전에 필요한 혜택이 먼저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복합 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보편화해 일상 속 행정 불편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AI 기반의 정책 토론과 숙의를 활성화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제도화하겠다고 “국민 주권을 더 충실히 구현하는 세계 최고의 AI 민주 정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적인 해결 방침을 밝혔다. 그는 “국가 폭력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사과하며 부적절한 정부 포상을 바로잡아 진정한 사회통합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약속했다.

/박경수 기자 gws0325@

李 대통령, 검찰개혁 강경파에 잇단 경고

중수청·공소청 첫 국무회의
“정치권력에 휘둘러선 안 돼”

이재명 대통령(사진)이 범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들의 주장을 직격하며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권 내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향해 “다시는 정치권력에 의해 수사·공소 기능이 약화되거나 휘둘리거나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중립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다. 지난 2일 중수청·공소청이 출범하고 처음 열린 국무회의인 만큼 이 같이 주문한 것이다. 이 자리엔 중수청장 직무대행인 전종민 차장과 공소청장 직무대행인 이정현 차장이 참석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전날(5일) 범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메시지를 연이어 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검찰개혁의 성과를 강조하며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냈음에도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자 ‘인사권’까지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같은날 오후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작가 등 범여권 강경파들의 과거 발언을 담은 영상을 재공유하며 “이 정부는 수사·기소를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되, 법무부와 행안부(행정안전부)에 따로 배속시키는 것으로 한걸음 더 나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발언 수위가 높아진 것은 기자회견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그리고 김지용 후보자 임명 관련 청와대 입장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강경파들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아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예진 기자 syj@

한병도 “AI 해킹 대응, 국가 과제로 격상”

(민중당 원내대표)

“AI 기반 방어체제로 전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최근 주요 금융회사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으로 고객과 직원의 정보 유출 등 피해가 잇따르는 것을 두고 “민주당과 정부는 AI(인공지능) 기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 공공 부문 디지털 안전 확보를 국가 차원의 통합 과제로 격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로 국민의 일상 속 디지털 안전을 촘촘하게 지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중은행에서 AI를 활용한 외부 해킹으로 추정되는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

한 가운데, 2금융권에서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한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일부 해킹 공격에서는 AI를 활용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점에서 사인의 엄중함을 더하고 있다”며 “기술의 발전이 국민을 겨냥하는 실질적인 위협이 됐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금융위와 금감원은 물론이고 과기부, 국정원, 경찰 등 유관기관은 철저한 조사와 함께 촘촘한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AI를 활용한 공격이 빠르게 고도화됨 따라 AI 기반 방어 체계로 전환도 시급하다”고 부연했다.

/박태홍 기자

민주당, 윤리특위 ‘여야 동수’ 추진

국민의힘 반발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요건과 관련해 위원을 ‘여야 동수’로 구성하는 안 야당과 협상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의힘의 수석대변인인 김태규 의원이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한 발언이 논란이 된 가운데, 민주당이 구성 요건을 ‘교섭단체’에서 ‘여야’로 확장하며 국민의힘을 압박

하는 모양새다.

김성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특위 구성과 관련해 여야 동수로 구성하는 안이 10월 2일에 발의돼서 의인과 올라가 있다”며 “한병도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야당과 관련 협상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태규 의원의 발언 등 윤리위에서 논의할 사항이 많은데,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수석대변인을 최소한 사퇴

시키는 등의 징계 조치를 하지 않고 있고 윤리위 구성에 협조하지 않아서 협상의 속도를 내보려고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리특위 구성 요건이 민주당과 국민의힘만 해당하는 ‘교섭단체 동수’가 아니라 ‘여야 동수’로 확장된다면 야당 몫에 국민의힘과 진보 성향 정당까지 포함될 수 있어 국민의힘의 반발이 예상된다.

22대 국회 개원 후 윤리특위는 수년째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윤리특위는 1명의 위원장을 포함해 총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윤리특위에서 표결을 거쳐 의결된 징계안은 본회의에 상정된다.

/박태홍 기자